

Global Korea의 통일정책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일시: 2011년 2월 25일 07:00

장소: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

연사: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3단계에 걸친 분단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영토분단(공간적 분단)이 있었고, 48년에는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분단을 경험했으며, 다시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민족분단으로까지 다다르며 3단계에 걸친 분단이 66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장(最長)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기나긴 시간동안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도 국민도 최대의 관심사는 대북정책이 되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면서 무리하게 통일을 이끌어가기 보다 현실에 입각해서 남북한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 업무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현인택 장관은 대북관계를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대북 군사위협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을 논할 때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안목과 혜안이 필요하며 그 몫은 그 나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현실을 분석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전망하고 새로운 환경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시적 안목에서 어떻게 북한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단 66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66년을 역사 속에서 수치적으로 비유해 보면 고려의 4분의 1이고, 조선왕조의 7분의 1로써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며, 몽골의 대원제국은 우리 분단의 시간의 2배 정도밖에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6년은 상당히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추진되어온 통일정책을 깊이 고찰하고 재검토·수정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조건은 ‘대북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주요 골자로 ‘Global Korea’의 통일 정책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의 의미와
정책 환경
변화

분단 직후 우리는 통일을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回歸)로 인식하며,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생활공간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다시 이전처럼 운영하는 것을 통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넘는 이 시점에서 '분단 이전 상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되돌아갈 분단 이전 상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통일 정책을 향한 '주체·객체·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우리 국민(주체) 중 북한의 현실을 알고, 분단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할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 대부분은 북한 땅을 밟아 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아 본 적도 없고 일을 같이해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단 이후 지나간 세월동안 국민들은 북한 동포를 정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배워서 알기 때문에 북한 동포를 포용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각인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같은 생활양식도 아닌, 우리와 너무도 다른 북한을 이해하기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을 배워서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통일은 감성적인 동포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의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삼국시대 만주지역의 영토가 한반도의 땅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듯이 지금의 세대에게 통일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닌 알고 배워서 이해하는 이성적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독일의 한 주간 잡지에서 서독과 오스트리아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통일을 해야 하는가 (100여 년 전에 비스마르크 이전의 시대에 한 나라로 지냈던 것처럼)?' 라는 질문에 서독과 오스트리아 99.9%가 '통일 하지 말자'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현상유지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충분하지 않느냐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가온 통일은 감성적 판단에 의한 통일이 아닌 이성적 이해를 통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이제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통일의 대상이 되었고, 통일의 주

체인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의 객체인 북한 주민들의 의식 역시 바뀌었습니다. 북한 역시 남한 국민들을 같은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남쪽에 사는 우리를 낯설어 하기에 전혀 다른 생활양식에서 살아온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가령, 탈북자들이 남을 향해 손짓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자유를 찾아 온 것이고, 여건이 더 낫다면 오히려 미국행을 선호 할 수도 있습니다. 분단 초기와 여실히 달라진 ‘민족’의 개념은 민족의 문화 동질성을 소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의 시각에서 북은 ‘김일성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갇힌 사회에서 북한 지배세력이 조직적으로 주입한 지식과 가치관을 진리로 배우면서 북한 특유의 외부와 단절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민족’인 자신들의 적이라고 배워온 남한을 ‘동족’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 사회학자들은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 존재 피구속성(Seinsgebundenheit)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서식처 (Social habitat)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우리를 ‘민족으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족 단일성을 앞세워 우리식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북한의 그동안의 군사적 도발로 보았을 때 북은 ‘동족(同族)’이 되어야 하는 적국(敵國)’이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포용해야 할 우리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 존재하는데 친숙한 주변국들에게 남북한이 통일하여 단일국가로 재등장하는 것은 큰 충격이 됩니다. 이제 통일은 한국의 민족 내부문제 (intra-national issue)가 아닌 국제적 문제(international issue)가 되었습니다. 통일한국이 자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주변국의 용인·지지·협력을 얻으려면 치밀한 사전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분단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하는 통일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습니다. 통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일의 목표, 통일정책 지침, 북한과의 협상 자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새로운 통일 정책 패러다임을 짜야 합니다.

Global Korea의
비전과 통일

21세기 통일정책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回歸)가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을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만들어야 할 창의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기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다루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국가 장기발전 계획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봅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내외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한 후진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 제일 성공한 민주주의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G20 국가의 하나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영도 국가가 되어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보장받는 성공한 민주국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시대역행적 1인 지배 전체주의 전제국가 체제를 고수하면서 자국 인민을 아사시키는 상태까지 전락한 실패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경제적 낙후국, 전 세계 몇 남지 않은 ‘독재의 전진기지 (outpost of tyranny)’로 멸시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남 북한 정부가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민족적 과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성취한 민주정치를 버리고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수용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풍요를 모두 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존경받는 지위를 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남 북한 정부가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식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여야 하는 통일정책 지침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Global Korea의 장기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서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절대적 빈곤을 면하지 못한 국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더 성숙하고 민주화된 (more mature and democratic)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권이 보장된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정치는 정착시켰으나 그 운영에서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 불



수 있는 것과 같은 성숙된 민주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책임 질 수 있고,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더 강한 자주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위력을 갖춘 나라, 강대국의 자의적 간섭에 국가 운명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장기 비전은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꿈이며, 통일 정책은 이러한 꿈과 연계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통일지상주의를 버리고, 이성적인 통일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꿈은 Global Korea의 꿈의 실현을 돕는 것이어야 하며 더 풍요롭고, 더 민주적인 한국, 그리고 더 강한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통일한국의 꿈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북한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고, 또 누리게 될 풍요와 자유와 자긍심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데 통일정책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새 통일정책
전개를 위한
과제들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 북한 동포들에게도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하고 Global Korea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우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군사적 우위'에 근거한 통일 정책은 필수조건입니다. 북한은 현재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앞세워 군사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자국 주도로 이끌어 가려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능력을 무력화(無力化)시켜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 주도 통일정책 전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경험한 북한의 안보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은 그동안 너무 오만했고, 때문에 북한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총생산 규모가 북한의 40배인 한국이 군비에서 북한에 뒤쳐져 있고, 현재 한국정부는 GDP의 2.7%만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만 1%만 더 국방비를 늘리게 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태세정비를 위해서 군사전략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전쟁, 월남전을 겪은 한국은 독자적인 전쟁 기획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자적인 군사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은 ‘거부능력 중심의 방어전략(Defence by Denial)’으로써 북한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싸워 격퇴하고 원상회복(status quo)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 북의 도발을 막는다는 것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은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공격할 수 있는 북한식 군사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능동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을 추구해야 한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처럼 보다 적극적인 안보태세를 갖추며 전략을 고안해 나가야 합니다. ‘억제 (deterrence)’의 3요소인 (1) 결정적 타격요소가 있고 (2) 사용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3) 준비도 되어 있고, 의지도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인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북한의 지휘체계와 공격의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우위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자위권을 위시하여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전기 미국과 구소련의 핵 대결과 핵전략의 지혜를 빌려, 남한이 10을 쓰고 상대인 북한이 100을 쓰게 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서서히 붕괴시키면서 구소련의 몰락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82년 율곡 이이선생은 현대판 ‘국방 선진화 보고서’에서 군비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흙담이 허물어지듯이 나라가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통일 문제의식을 통일하는 일,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로 통일된 통일의를 갖게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통일 문제를 놓고 뜻을 달리하는 국민들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바로 ‘남남갈등’입니다. 남남 갈등은 북한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생긴 현상입니

다.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민들은 같은 민족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족’을 앞세우면 남북한 주민 간에 모든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적 낭만 주의자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를 ‘한민족’ 성원이 아닌 ‘김일성민족’ 성원이라 생각하고 한국 주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교육받고 또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이란 생활양식을 함께하면서 문화 동질성 가제 된 인간집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주민의 90%는 생활양식을 함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오랜 접촉을 통하여 생활양식의 동질화, 문화 동질화를 이루어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에서의 다른 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같은 인식의 틀(perceptual frame)과 행위 선택의 틀(behavioral frame)을 가진 ‘같은 민족성원’은 이미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환상적 통일 지상주의자가 태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이분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은 정치 지도자, 학자, 언론인 등 사회 교육 일선에서 있는 지식인들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적극적으로 통일외교를 펴나가야 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민족 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문제입니다.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의 국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주변 국가들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나 해당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평화 지향적 국가가 될 것이며 지역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넷째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북한정부 당국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제 개혁을 하려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하면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정책을 ‘길들이기 정책’으로 서서히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24시간 우리의 정책 틀 속에 넣어 놓고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국 주도의 통일은 가능해집니다. 60여 년 동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를 하나로 통합해나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의 엄청난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나가지 않으면 통일을 주도해나갈 수 없습니다.

맺는말

북한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칼 포퍼(Karl R. Popper)가 말하는 ‘닫힌 사회 (closed society)’의 전형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공동체 내에 형성된 마술적 규범을 존중하고 행복도 전체의 행복으로 정의하는 주어진 계급에 맞추어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닫힌사회 주민이 된 북한 동포들이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한국이라는 ‘열린사회(open society)’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과 같은 언어로 민족통일·행복·정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사회가 열린사회로 발전하여 우리와 같은 합리적 가치 준거 위에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지한 통일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닫힌 사회는 바깥세상과의 벽이 허물어질 때 쉽게 열립니다. 닫힌사회 주민을 포로로 묶어두었던 주술적 교리들이 허물어지면 그 사회는 흠담이 허물어지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닫힌사회였던 구소련도 밝은 바깥세상의 빛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쌓아왔던 허구적 마술교리들이 허물어지면서 안에서부터 붕괴되었습니다. 21세기에 남아있는 마지막 닫힌사회인 북한 체제도 머지않아 내부 붕괴의 길로 들어서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흐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침착하게 새로운 통일정책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복고적 마음자세로 다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통일한국을 그려 놓고 이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또한 통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이지 정감적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다룰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가슴 속의 동포애가 식어서는 이를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도 침착하게 새로운 통일 정책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질의 & 응답
및 코멘트

Comment (유석렬 교수) Global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군사정책에 중점을 두고 강연하셨습니다.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권’ 과 ‘국민’ 을 구별하는 정책,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에게 역점을 두는 ‘아래로부터의 (bottom-up)’ 통일정책 접근방법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요?

A__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Comment (유재갑 교수)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억제 전략’ 혹은 ‘방위전략’ 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혹은 ‘예방전쟁 (preemptive war)’ 역시 합리적인 명분과 상황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음을 덧붙여 말하고자 합니다.

A__ 감사합니다.

Question (유세희 교수) 북한의 핵 도발과 핵 억제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한의 핵보유가 논의될 수 있는데, 왜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 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A__ 한국의 ‘핵무장’ 과 관련해서 1970년대 한국의 국제정치학회에서 대규모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핵을 보유할 것인가? 포기해야 하나? 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인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유인즉, 바로 에너지 문제 때문이었다. 핵을 무기로서 보유하게 될 경우 이에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국내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90%이상의 전기를 핵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하게 될지 모르는 한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신중하고, 반대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Question (김기수 박사) 통일정책을 위해 ‘주변국가와 외교를 잘해야 한다.....’ 는 제안에서 특히 중국과 협조를 해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과연 협조할까요?

A__ 중국은 끝까지 북한을 지원하려 하겠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한반도 통일정책을 실용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가령,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경계에 대상으로 둘 것입니다. 일본 역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안보의 위협을 느껴 정치적 의지가 다다르게 된다면 단기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지혜를 얻어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전향할 수 있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중국을 설득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Question 지난 66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군사적 응징 혹은 보복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에서의 북한 도발에서 조차 제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보복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과연 북한을 포기하겠습니까?

A__ 한국이 통일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중국이 남북의 통일에 중재를 하면서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경우 더 실익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입장은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군사도발과 같은 사건이 향후 발생한다면 이전과는 분명 다른 확고한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최춘흠 박사) 지난 10년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은 북한을 중국에 ‘편승’ 혹은 예속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북한을 대만에 향한 정책과 비슷하게 ‘통합’ 형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에 전략과 관련해서 ‘통합’ 혹은 ‘편승’이라는 구체적인 전략 대안은 없습니까?

A__ 단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현재 중국이 티베트 등의 내부문제 관리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2400만 명의 이질적인 북한 사회를 모두 통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